

대선후보 새해 첫 공약

李 “최대 5년 월세 공제”

무한책임 부동산공약 4 발표
공제 기준 완화·공제율 확대
“세입자와 청년 부담 줄일 것”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도층과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등을 돌렸던 중도층·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를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선,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취득세를 최고구간 기준 확대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4’를 내놓으며 “월세는 꼬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월세 공제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1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

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 도입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 확대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尹 “국민 맞춤형 정부 구축”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 발표
마이 AI포털 도입, AI 집사 서비스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 제공”



지난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를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 만들겠다고 관련 공약을 2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발표를 열고 ‘마이 AI(인공지능) 포털’ 도입, ‘AI 집사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정직한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려는 배경에 대해 “과격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과의 친분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마이 AI포털을 도입하고 AI 집사 서비스 도입을 통해 몰라서 복지혜택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마이 AI포털과 AI 집사 서비스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집어넣어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 기록, 일자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를 통해 정부가 집사처럼 알아서 챙겨 주는 시스템이 가능해지고 정보 제공뿐만 아니

라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는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방역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로 국가 방역 체계를 넘어서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 측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효율화할 경우 의료, 사법, 산업, 세금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윤 후보는 IT에 익숙지 않은 국민들도 쉽게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를 구축하고 디지털가이드 1만 명을 채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

安 “기초생활보호 대상 분양의무자 기준 폐지”

혁신 복지정책 공약 제시
“절대빈곤층 국가가 책임져야”

한분 정도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층이라는 뜻”이라며 “절대빈곤층이 존재하는 나라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돼야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작년 8월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그러나 진실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였다. 특히 빈곤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일 새해 첫 공약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맹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담대한 변화와 혁신’ 복지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최악인 수준인 43.4%에 달한다. 어르신 두 분 중

이준석 “선대위 복귀 가능성 없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대위 혼란 여전, 쇠신 필요한 시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1일 사퇴 기자회견 후 선대위를 이탈했고, 외곽에서 선대위 쇠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방송에 출연

해 선대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로 ‘선대위 복귀가 없을 것’이라고 굉장히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저는 전혀 합류할 생각이 없고, (선대위 복귀를 위한) 조건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선대위 회의에서 공식적인 내부 회의 자리에서 제기했던, 논제들도 다 거부당했고, 제가 정당하

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내렸던 지지도 항명성 발언으로 부정됐다”며 “그런 것을 바로 잡자는 제 주장도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발언으로 부정됐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두루 앉아 있는 선대위에서 무슨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하락세에 접어든 윤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 “선거에선 항상 표를 얻기 위한 득표 전략과 감표 방지 전략이 중요하다”며 “지금 당의 의석 구성을 보

의무를 가족에게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전증여를 통해 수급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를 7년으로 늘려 강화하겠다”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근로장려제도 강화를 통해 탈수급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표나 얻으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이나 허황된 공약으로 흑세무민할 때가 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일 새해 첫 공약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일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대표회의실에서 복지정책 발표를 하는 모습 /뉴시스

니다”라며 “저 안철수에게 차기 정부를 맡겨주신다면, 복지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과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과 집중복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면 영남 60석에, 충청·강원 20석, 비례 20석, 수도권 일부”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이분들이 표를 잃지만 않으면 이기는 선거구에서의 당선 전략을 경험적으로 가진 분들이 모여서 지금 선대위를 구성해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대위라는 것이 선거 과정 중에 두 번씩, 세 번씩 재구성되는 것”이라며 “과거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선 후보 선대위가 혼란이 있느냐가 계산을 정확히 정리했는데, 그것이 대선 한 70일 전이었다”고 선대위 쇠

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후보의 토론 회피 논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회피하는 쪽에서 무조건 패널티를 받고 간다”며 “그런 제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유리한 역제안을 던지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거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토론 제의가 들어오면, 토론 주제를 윤 후보가 설정해 역제안해야 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